

# “정치적 고려없이 법리로만 판단해달라”… JY의 운명은

&lt;이재용&gt;

## 이재용 항소심 오늘 선고

실형이냐·석방이냐 삼성 ‘폭풍전야’  
선고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 대비중  
“여론·정부기조 등 외적변수 없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4일 삼성에는 ‘폭풍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난해 8월 말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삼성은 2심에서는 무죄 혹은 최소한 집행 유예로 이 부회장이 풀려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에 따라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별도의 회의는 열지 않았으나 관련 팀을 중심으로 선고 이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관계자는 “이번에는 꼭 풀려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길 바라지만 지금으로선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 부회장이 석방될 경우와 또다시 실형을 받을 경우에 각각 대비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우선 이 부회장이 풀려날 경우 메시지와 행선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달

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과거 이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는 먼저 회사에 들러 임원들과 잠시 회의를 한 뒤 귀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1년간 구치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울 서초동 집무실이 아닌 한남동 자택으로 직

행해 몸을 추스를 가능성도 있다.

석방될 경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즉석에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원론적인 수준에서 나올 개연성이 크다.

반면, 또 다시 실형 선고가 나와 구속 상태가 이어질 경우에는 변호인단이 언론을 통해 판결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즉각 상고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1심 때도 변호인 측은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비교적 강한 어조로 재판부를 비판한 바 있다.

삼성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철저하게 법리에 근거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특검이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삼성에 대한 일부 부정적 여론

동향,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 등이 재판에 ‘외적 변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모습이다.

삼성의 한 계열사 임원은 “항소심 공판을 통해 청탁과 뇌물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이 상당 부분 확인된 것 아니냐”면서 “정치적, 사회적 고려 없이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5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31일 열린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방청권 추첨 경쟁률이 6.6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1심 선거공판에 비해서는 하락한 수치지만, 국민의 이목이 쏠려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고병원성 H5N6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평택시 한 산란계 농장 주변에서 지난 달 29일 방역 관계자들이 출입 차량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농식품부 ‘AI 방역 위반’ 204건 무더기 적발

소독설비 관련 위반 가장 많아  
소홀 농가에 고발·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올해 1월 31일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 시설 및 차량 등을 점검한 결과, 소독 미실시·일시 이동중지 위반 등 204건의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관련 위반 76건(37.3%)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44건(21.6%) ▲가축

사육업 허가·등록 위반 25건(12.3%)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시설기준 위반 19 건(9.3%) ▲축산차량 등록·관리 위반 15 건(7.4%) 등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가, 축산시설 및 차량 등 방역주체별 방역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 등은 가금농가,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과 함께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 여객선·낚시어선·항만 등 ‘안전대진단’ 실시

### 해수부 관련 분야 6243개소 대상

해양수산부는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여객선, 낚시어선, 국가어항, 항만 시설 등 해양수산 분야 총 6243개소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해양수산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은 해양수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고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실태와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재난관리 활동이다.

올해는 지난해(3179개소)보다 점검대상을 확대해 총 6243개소의 여객선, 낚시어선, 국가어항, 항만시설 등에 대해 분야별 맞춤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생한 낚시어선 충돌사고를 계기로 올해에는 점검대상 낚

시어선 수를 3배로 확대했다.

지자체에 등록된 낚시어선 약 4500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표를 마련해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 협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수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으로 즉각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해 즉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추가 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과 앱(App)을 통해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

## 사무감사 부당·인사발령 불이익 등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4일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 사건 피해자이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조사단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 받았다. 조순열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 단 소속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2010년 10월 동료 검사의 상가에서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청취했다.

서 검사가 당시 근무처의 상관 등에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가해자 감찰 등을 요구했는지,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법무부 간부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건 진상규명 요구를 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박 장관이 서 검사의 이메일을 받은 뒤 법무부 간부를 만나 자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지난달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모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한 얘기를 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간부를 만난 자리에서는 서 검사가 진상조사 요구를 하지 않아 조사에 나서는데 한계가 있었고 ‘부당한 사무감사나 인사 불이익’에 관해서는 직속상관 등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라고 전하는 선에서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 검사 측은 성추행 피해를 본 사실, 그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 인사 불이익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뒤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이 이어졌다는 서 검사의 의혹 제기에 대한 진술도 들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당시 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상당 부분 부당했고, 그 결과 종장 경고를 받고 인사조치를 당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과 당시 법무부 검찰 국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덮고 인사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검사장은 “오래 전 일이고 문상 전 예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만 그 일이 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진상조사단은 서 검사의 폭로에 이어진 비난 등 2차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준 기자 joker@

## 서지현 검사, 성추행 진상조사단 출석… “모든 의혹 조사”